

비정규직철폐!

구조조정분쇄!

여성노동권 쟁취!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 무상교육 실현!

비정규직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학생 실천단

118주년 노동절
교양자료집

사회주의학생동맹/ 성공회대 사람세상/ 성공회대 역사·철학회
성공회대 INTERNATIONAL/ 연세대 [살맛]/
청년인하/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비정규직철폐!

구조조정분쇄!

여성노동권 쟁취!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 무상교육 실현!

비정규직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학생 실천단

118주년 노동절
교양자료집

사회주의학생동맹/ 성공회대 사람세상/ 성공회대 역사·철학회
성공회대 INTERNATIONAL/ 연세대 [살맛]/
청년인하/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목차_Contents

노동절(MAY-DAY), 역사와 의미	1
정세전망, 기조해제	5
일상적 노학연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15
투쟁사업장 소개	23
교육, Education	28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학생실천단" 의 의미	41
미완의 혁명, 4월 민중항쟁	46
국가의 경계를 넘어 터넷독립운동을 지지할 때	49

part. 1

노동절 (MAY-DAY), 역사와 의미

118주년, 역사 속의 메이데이

다가오는 5월 1일은 메이데이 즉, 세계 노동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을 모른 채 지나간다거나, 118년의 역사를 자축으로 기념하는 데에 족하기도 한다. 그러나 메이데이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노동자들의 현실을 역사로 담아낸 날이다. 때문에 오늘 날의 메이데이도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로 보면서 맞이해야 한다. 이는 바로 끊임없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려서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노동자는 “남성, 여성, 노인, 젊은이, 어머니, 아버지, 장애인, 비장애인” 등의 우리네 사람들이 겹치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듯 메이데이는 우리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날인 것이다.

1886년 당시 미국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각 도시에서 주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와 파업을 동시에 일으켰다. 당시에는 고용주 마음대로 노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시간 휴식’이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실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가 계속되던 5월 3일, 사태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시위대에 마구잡이 발포를 하여 6명의 노동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분노한 미국 노동자들은 ‘헤이마켓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집회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날아온 폭탄이 광장에 떨어졌고, 이 사건으로 시위대 경찰 할 것 없이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 폭탄 투하 사건을 ‘시위대 측의 음모’로 규정짓고 스파이스를 비롯한 주도적 노동운동가 8명을 체포, 무려 5명을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헤이마켓 폭탄 투하 사건은 자본가들이 시위를 교란시키기 위해 꾸며낸 사건임이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려 했던 자본가들의 의지가 무고한 사상자와 누명을 입은 자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끓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스의 법정 최후진술〉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켓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
이 지나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
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현재로써는 너무나 익숙한 8시간 노동, 8시간 수면, 8
시간 휴식이 노동자들의 저항 속에서 이뤄낸 진보의 역사임을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5월 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제 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
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
절로 결정하고, 이날을 기해 모든 나라·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
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제1
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른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
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메이데이는 독립
후 독재 정권이 장악했던 시절에도 여전히 노동운동의 분출구였고 이는 소위 ‘민주공화국’ 시
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5월 1일은 34만 명이 모인 대규모 투쟁의 도화선이 되
었고, 1991년 메이데이는 강경대 열사, 박창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한 5.6월 대투쟁의 불씨
로 작용했다. 독재 정권이 아무리 5월 1일을 엉뚱한 날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며
노동자들의 기억 속에서 메이데이를 파내려 했어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다.

메이데이의 의미와 현재성

노동자가 변혁의 주체로 등장하다

이처럼 메이데이는 자본가들과 정부에 대항해 온 각국의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투쟁한 역
사이다. 그러나 메이데이가 ‘달력상으로 정해진 국제적 시위의 날’로서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메이데이의 의미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한데 모아 사회를 변
혁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노동자가 변혁의 주체임을 재확인 하는 자리이다.

변혁주체의 등장은 그들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정
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구조에서부터 시작한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나
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74년 메이데이에 모인 10만의 인파를 시작으로 15만, 20만, 나아가 대규모 점거 파업으로
정권을 위협했던 포르투갈의 노동자들, 4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연대파업으로 국가 전체를 혼
들었던 폴란드의 노동자들의 사례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험은 메이데이는 아니었지만 2월 23
일 국제 여성의 날에 러시아의 여성노동자들이 벌인 대규모 가두시위를 30만 명의 대중 파업
으로 이어지게 했고, 이 파업은 러시아의 2월 혁명으로 번져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억압받는 노동자의 현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메이데이는 어떠한가. 백여 년 전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아 저런 일도 있었구나. 저때는 저랬구나.”하며 단순히 기념하며 보내야 할까?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계속되는 장기침체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세계경제는 자본주
의 체제의 한계를 곳곳에 드러내고 있다. 한국 자본도 이러한 한계에 돌파구를 내고자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고 있고, 매설계 몰아치는 구조조정의 광풍과 높은 청년 실
업률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노동력이 부족
한 기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세계로 몰아내고 있다.

118년 전 8시간 노동을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의 외침은 12시간을 일하고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는 오늘 날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과거의 구호’가 아닌 ‘오늘의 구호’로 다가온다. 이
렇듯 세계는 지금도 투쟁하는 메이데이가 필요한 것이다.

수많은 착취와 억압을 받는 무수한 노동자 민중들이 소외, 빈곤, 전쟁과 실업의 공포가 아
닌, 이 모든 것들을 억압을 만들어내는 ‘자본의 세계’가 아닌,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 노
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발판으로 한 변혁적 투쟁을 통해 새로운 해방 사회를 꿈꾸게 하는
그런 메이데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자·학생 연대로서의 메이데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오늘날의 대학 현실은 자본화된 면모들이 학교라는 공간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속에서 오늘날의 학생들은 사회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된 교육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다. 그러기에 메이데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얘기만이 아니다. 자본의 모순들이 깃든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생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변혁시켜내기 위한 날인 것이다.

높은 등록금으로 빼앗긴 교육의 기회와 산학협력과 같은 자본과 대학의 협조관계 속에서,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저 기업에 좋은 인재를 만드는 취업공장으로서의 대학의 모습, 졸업 후에는 88만원세대라는 저임금의 착취구조 속에 빠지는 모습, 교육의 당당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배움의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학생의 모습, 이처럼 학생이라고 해서 지금의 자본주의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들은 누구 하나의 별개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와 학생이 힘을 합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맞서는 것은 좀 더 나은 사회를 향하는 길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번 118년 맞이, 4·30 -Mayday는 이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으로 억압받는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part. 2

정세전망,
기조해제

정세전망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문가들은 1973~75년 '1차 오일쇼크' 때보다, 그리고 2001년 '정보통신(IT) 거품' 붕괴로 인한 침체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지금이 훨씬 나빠서, 2001년 거품 붕괴 이후 없어진 월가의 일자리가 모두 3만9800개인데 비해 현재는 9개월 동안에만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기름 값만 문제가 됐던 오일쇼크 때와 달리, 원자재와 곡물 값이 함께 오르는 현재는 개인 소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 경제위기에 이명박 정권도 '위기'를 운운하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이후 최대 경제위기"라는 등,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도 든다"는 등 걱정이 많이 되나보다. 경제성장을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이라는 목표에 어울리지 않게,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외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첨단 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에서 일자리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불안을 느낀 이명박 정권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근이나 밀가루 가격은 매점매석 금지로, 학원비 인상은 학원가격 표시제로, 기름 값 인하는 주유소에 대한 가격 실시간 공개로, 즉 '단속'과 '감시'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계급은 정부의 이런 조그만 '규제'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번 물가인상은 해외 발 원자재가와 원유가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의 물가 단속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물가는 국민 모두가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과 정권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자본계급도 물가 인상 통제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재가 및 원유가가 인상됨으로써 발생한 '이윤 하락'은 자신을 증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에게 있어 참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별 자본은 다른 개별 자본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보다



▶ GM대우를 찾은 이명박과 고공농성중인 GM대우비정규직지회 지회장동지

났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한지 15일 만에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을 철저히 짓밟았다. '비정규직 희망의 마을'로 불렸던 사상 최대의 천막촌을 200명의 용역장래와 700명의 경찰병력으로 강제 침탈한 것이다. 코스콤 조합원 60여 명이 쇠사슬에 몸을 묶어 자물쇠까지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그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다. 즉,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짓밟음으로써 자본의 이윤을 더욱 확보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이다.

이명박 정권의 위와 같은 의도는 이미 이명박이 당선자이던 시절부터 잘 드러났다. 당선자이던 시절, 이명박은 GM대우 부평공장을 제일 먼저 방문하여 "일자리가 있으면 중산층이 아니다"는 등, "모든 노동자들이 24시간 맞교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등 헛소리를 내뱉었다. 일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12시간씩 밤낮없이 일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헛소리 중에서 단연 압권은 "GM대우가 노사화합의 모범기업이다"라는 말이다. 이명박이 방문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공장담벼락 바로 옆에서는 해고 노동자가 해고자복칙을 요구하며 30미터 철탑 위에서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던 것을 이명박은 과연 몰랐을까?

GM대우 부평공장은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용불안이 고조되어, 마침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GM대우 자동차 비정규직지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GM대우는 금속노조 차원에서 요청한 18차례의 교섭요청조차 거부하며, 비정규직지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GM대우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30미터 철탑 위에서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 모습이 이명박의 눈에는 '노사화합의 모범기업'이었을 것이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하여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 않다. 체포전담반의 부활, 폴리스라인 침범 시 테이저건 사용 등은 둘째 치고, '매법' 운운하며 불법시위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엄포부터 장난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필수업무유지제도'를 도입하여 야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상태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필수업무유지제도이다. 그런데 이 최소 인원 비율에 대한 결정 방식은 '노사간 합의'이다. 하지만, 파업을

더욱 자신을 부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하락하는 이윤을 어디에서 채워 넣으려 할까?

그에 대한 답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취임 15일 만에 백일하에 드러

하려는 노동자와 생산을 계속하려는 자본가 그 비율을 합의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노사간 합의로 결정되지 못할 경우, 필수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비율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지노위는 도시철도공사 파업 직전에 필수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 비율로 기관사 100% 책정했다. 파업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통해 정부와 자본이 궁극적으로 이루려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노동자들을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로 발생하는 이윤의 하락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손쉽게 해고하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서 자본은 더욱더 배불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일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계속해서 불안정해지는 일자리 때문에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삶의 질은 점점 악화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교육, 의료, 대중교통 등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공공서비스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점점 박탈당하게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점점 나락으로 빠뜨리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인 것이다.



제1차 공동총회 (출처: 사노넷)

이런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3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철도웨딩홀에서는 400여 명의 비정규노조와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 분쇄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공동총회가 열린 것이다. 10개월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노조, 무자비한 폭력침탈을 받았지만 당당히 천막을 재건한 코스콤비정규지부, 4년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기흥전자분회, 여전히 고공농성을 전개 중인 GM대우비정규지회, 코스콤과 마찬가지로 천막침탈에 굴하지 않고 노숙농성까지 하면서 싸우는 학습지노조... 투쟁사업장들은 다시 뭉쳤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투단의 투쟁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코스콤 천막 침탈에 맞서 코스콤 동지들은 침탈된 지 8일 만에 농성장을 재건할 수 있었다.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설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천막재건 바로 전날, "비정규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엄호 아래 함께 천막을 치려던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코스콤 동지들은 말한다.

투쟁 대오가 항상 적던 재능 지부도 천막 침탈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재능 자본은 구사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천막을 침탈하고, 재능 본사 후문 앞에 커다란 구조물을

세우고 펜스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철조망까지 쳐냈다. 이런 재능 자본의 폭력만행에, 공투단 동지들은 펜스를 뜯어서 시민들에게 재능 자본의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참으로 통쾌한 투쟁이었다. 면목점 점거 이후 타격투쟁을 진행하지 못하던 이랜드·뉴코아 동지들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모였던 28일 오후에 매장타격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전국대학생공동행동을 저지하고자 동원된 경찰병력 대부분이 부랴부랴 상암 월드컵 홈에버점 앞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투쟁하고 있는 현장 동지들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런 공동투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개별 투쟁사업장들 중에서 코스콤, 뉴코아, 이랜드 동지들이 “어떻게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왜냐하면, 자신의 투쟁사업장이 아닌 다른 투쟁사업장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사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투단의 투쟁은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계급적 연대투쟁을 보여줄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총회를 같이 함으로써, 그냥 자리만 채워 앉아있다 오는 연대투쟁이 아닌 실천투쟁을 함께 하는 연대투쟁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신들의 투쟁에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 둘 씩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회에서 공투단 대오가 용역깡패나 폭력경찰들과 싸워 우리의 전술을 성공했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사업장의 승리가 아니라 ‘공투단의 승리’, 즉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공동투쟁, 계급적 연대투쟁을 통해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방법을 공투단은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과제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는 이 시기. 게다가 이미 2007년부터 자본이 비정규직 활용방안을 서로서로 모색해왔던 이 시기. 올해 또 천절한 경총에서 비정규직 활용방안 보충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에 의한 ‘구조조정’이다. 이 구조조정은 비단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빼앗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기아 자동차 화성공장에서는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조합원들이 몰아내는 사건이 있었다. 비정규직의 존재가 있기에 자신들이 고용이 그나마 안정될 수 있다고 여긴 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말, 기아 공장을 비밀리에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규직 조합원들은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나섰다. 자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결국에

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의 처지로 내몰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아의 모습은 지금 현재 남한 전체 노동계급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구조조정 반대’라는 명확한 슬로건을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연대 투쟁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은 대처와 레이건을 벤치마킹 하고 싶어 한다. 항공관제사 파업을 깨기 위해 48시간 내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11,345명을 해고시킨 레이건. 해고된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12년간 복직할 수 없었고, 자본가들은 이윤을 하락의 압박 속에서도 잠시나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이런 자본과 정권의 악랄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가권력에 도전’해야 한다. 95년 한국통신 노동자들이 민영화에 맞서 싸워 얻은 명찰은 ‘국가전복세력’이었다. 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에게 그 명찰을 주면서 ‘단호하게 탄압’을 자행했고, 정부만큼 단호하게 투쟁할 수 없었던 한국통신 노조는 안타깝게 패배했다. 우리는 이런 패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폭넓은 연대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대정부투쟁 계획으로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번 4.30-Mayday 실천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들을 알려나가고, 이 투쟁이 발발했을 때 너른 연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우리의 투쟁은 수세적인 방어에서 멈춰 설 수 없다.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해나가는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급적 연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세적인 투쟁의 좋은 예가 바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다. 주간연속 2교대란, 한밤중에 일하는 야간 노동을 철폐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독일수면의학회 연구발표에 따르면 주야교대제로 30년 정도 일할 경우, 수명이 13년 단축된다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간 2500시간이다. 낮은 기본급으로 잔업 특근 등 시간외 수당에 의존하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여,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바꿔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이 현재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요구와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에게 자본과 정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의 구조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로 하락시킬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고된 이중노동을 감내하면서도 더 큰 착취 속에 살아야 하며, 생리 휴가나 육아/보육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점점 박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점점 상품화되어 높은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팔리고, 학문은 자본에 팔리는 상품이 되어 자본에 맞게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비용’은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통해 우리 민중에게로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본과 정권에 맞서 최전두에서 싸우고 있는 투

쟁에 연대를 함으로써, 자본을 압박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기조 첫 번째 -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철폐'가 현재 이 땅에서 가장 핵심쟁점이 되는 투쟁 과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비정규 개악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추어 자행된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선 이랜드-뉴코아 투쟁, 위장도급 판정에 맞서 싸우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남한 계급투쟁을

선도하는 운동들의 핵심 구호로서 부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한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자신의 이윤을 보존하려 한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혹은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각종 4대 보험과 수당, 산재처리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고용 형태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하는 임금 노동자들의 파탄고 있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는 절대 단순한 '정규직화 쟁취'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같은 협소한 구호로 간해서는 안 되는 기조이다. 자본이 대다수 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설 수 없도록 단결을 와해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기간제와 간접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외양만 정규적인 직무급제, 아예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를 통하여 분열되기도 한다. 또한 성별과 장애 유무, 국외로부터의 이주라는 조건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고용됨으로써 분열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투쟁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를 통해서 노동계급이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존재로서 머무르지 않고, 함께 전체 자본에 맞서 단결 투쟁할 수 있도록 하자.

전체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은 단순히 추상적인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07년 이랜드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현장으로부터 격화되는 투쟁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전체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사업장의 투쟁도 격화되기란 쉽지 않다. 자본과 정권은 강고한 카르텔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내에서의 분열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분열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단결로 만들어진 공동투쟁단 활동에 적극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조 두 번째 - 구조조정 분쇄!

구조조정은 이 땅의 노동계급과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을 말살하는 자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의 전 부문에서 실시되었던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들이 대거 비정규직화 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투쟁만 보더라도 외주화와 기업 매각의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비정규직화가 발생하였으며, 학습지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로 고용된 것은 예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 형태가 대거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아 자동차 공장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대대적인 비정규직화가 예상되는 현실을 보았을 때, 자본의 구조조정이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나락의 길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본의 구조조정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사회공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육아/보육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점점 축소되면서 여성들은 점점 더 이중 노동의 부담이 가중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교육은 점점 상품화되어 높은 비용으로 학생들에게 팔리고, 학문은 자본에 팔리는 상품이 되어 자본에 맞게 변화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충분한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과 서비스 제공 부문들이 제거되는 것이 예상되는 바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사회적 지위가 점점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현실, 공공부

문의 구조조정으로 공공성 보장을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문들이 잘려나가는 현실. 이렇듯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구조조정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민중들의 생존권과 공공성을 파괴하는 주범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사회공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자본과의 대립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부터 막아내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실시로 야기될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이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앞장서서 벌여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투쟁은 결국 자본과 정권의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투쟁을 할 때만, 공공부문 민영화는 저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4월부터 확실한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 산업 전 부문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의 심각성을 전국 노동자 및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을 준비하자!

기조 세 번째 - 여성 노동권 쟁취!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별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노동현장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여성노동력이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발생하는 일이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 속에 70%가 여성노동자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여성이 일하기 위해,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은 사회화 시키겠다는 여성의 일을 또 다시 여성들만의 일로 만들어 버렸다.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서비스 노동, 그리고 여성들이 기존에 가정에서 행해지던 노동들이 대부분 사회의 일자리에서도 여성들에게 맡겨졌고,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남성들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이 있었다.

이렇게 핵심 노동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남성을 '보조'하는 노동으로 취급되었던 여성들의 노동은 가족 밖에서도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이 아니라 생계를 '보조'하는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랜드나 KTX 등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비정규직에, 저임금으로 몰려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사측은



핵심적인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외주화로 더 낮은 임금의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이 너무나 쉽게 해고되는 이유가 가정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노동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대적인 비정규직화와 노동 유연화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남성 노동자의 임금만으로 노동자들 전체의 생존권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여성 노동의 부차화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재능 학습지 투쟁, 기륭전자분회, 이랜드-뉴코아 투쟁까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투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은 당당한 주체로서 설 수가 있다. 여성에게 떠맡겨진 출산/육아/가사노동 부담의 사회화, 여성 비정규직 철폐와 생활 임금 보장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화, 노동 현장에서의 성폭력 추방을 통한 동등한 주체로서의 인정 등은 단순한 캠페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자본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주체가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과정에 연대함으로써, 저평가 받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 투쟁에 연대하도록 하자.

기조 네 번째 -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 무상 교육 실현!



학생운동의 주체로서 우리는 교육부문에서의 대중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성을 확인하고 자본에 맞서는 현장에서의 대중투쟁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신들의 대중단위인 대학 공간 안에서 자본과 맞설 수 있는 대중운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선 자본주의 체제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학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대학에서 핵심이 되는 커리큘럼은 점점 학생들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높은 가격을 매겨 자본에 팔릴 수 있는 고급 노동력이 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경쟁을 통해 다른 이를 이기고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되며,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쟁 논리 안에서 교육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는 현실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에 의한 대학 공간의 재편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이다.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은 노동계급에게 실질 임금의 삭감과도 같은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대학 공간이 노동계급의 전체 이해에 맞도록 교육비용을 확실하게 덜어낼 수 있는 구조를 내걸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이미 등록금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4월 시기에도 학생들의 이런 문제들을 발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무상교육이 쟁취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상품화 방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교육의 실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적 성과를 얻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본에 의해 구조조정 당하는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대중교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part. 3

일상적 노학연대로 비정규직 철폐 학자별 폐하자!

■ 우리는 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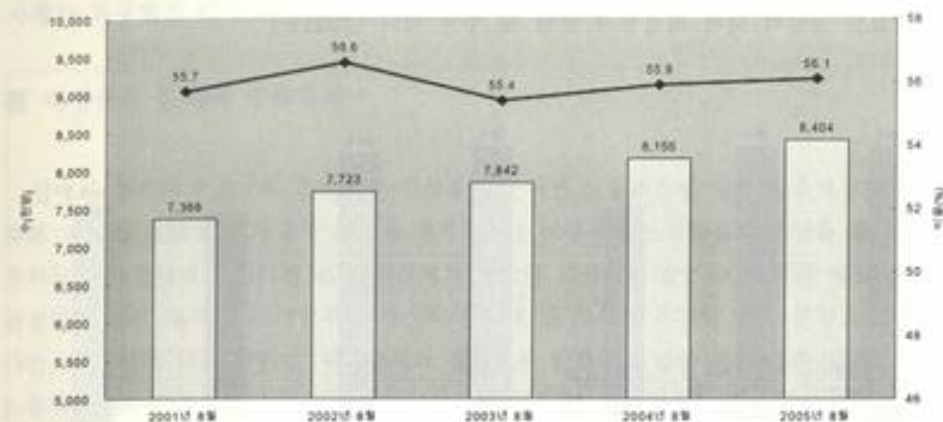
118년 전 해이마켓에서 울려 퍼졌던 구호만큼이나 절실하게 “불법과건 인정하라!” “고용안정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의 구호를 외치는 남한의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막연하게나마 비정규직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될 대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그 막연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한의 비정규직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어섰고 작년 7월에는 비정규직을 무한 양산하고 그 착취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어영부영 정신 못 차리는 안 우리는 자본가 계급의 편치를 속절없이 허용했다. 점도 자주 맞으면 너다운 된다는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자본가 계급의 편치를 똑바로 두 눈 뜨고 보면서 그들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때이다.

■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그 실상은 어떠한가?

비정규직은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자’이다. 그러면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형태로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유형은 정규직을 정의하는 주요 세가지 기준(기간, 고용형태, 근무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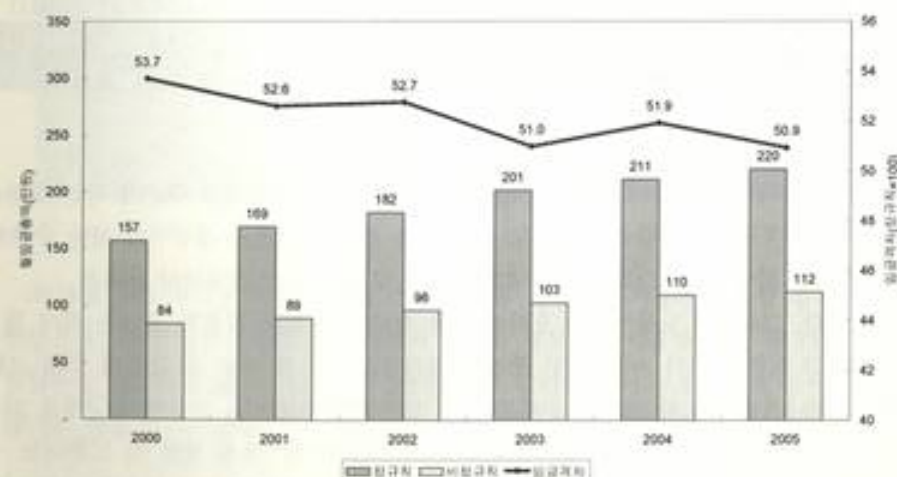
기간제 노동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뿐 실제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간접고용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여러 노동문제 연구소 자료들에서 비슷한 규모로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다.
특수고용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들이밀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사용자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수당을 받음.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차주, A/S 기사, 애니메이터 등등이 속한다.

[표11]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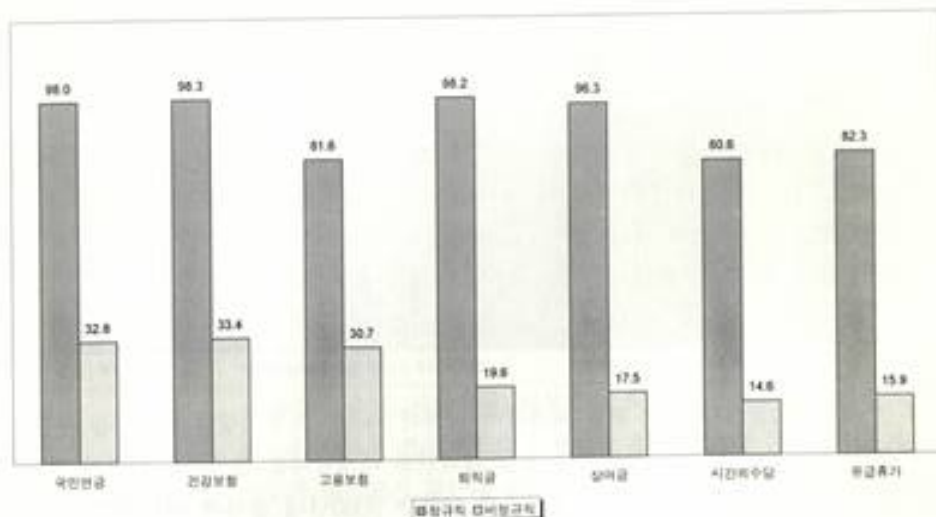
97년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남한의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한다. 특히 97년 국회에서 날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합법적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꾸준히 증가하던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50%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여러 조사들에서 현재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노동시장은 마치 연체동물과 같이 유연해질대로 유연해졌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존재로 혹 자신의 지위가 하락하거나 상실될까봐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함께 비정규직에게는 여러 고통들이 주어진다.

[표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



1) [표1]~[표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활동부가조사 2005

[표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보험 및 수당 격차 (2005년)



[표4] 근속년수 계층별 분포 (2005년, 단위: %)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임금노동자	39.3	13.6	9.0	9.9	12.1	16.0
정규직	15.2	11.5	9.4	12.4	19.6	31.9
비정규직	58.1	15.3	8.8	7.9	6.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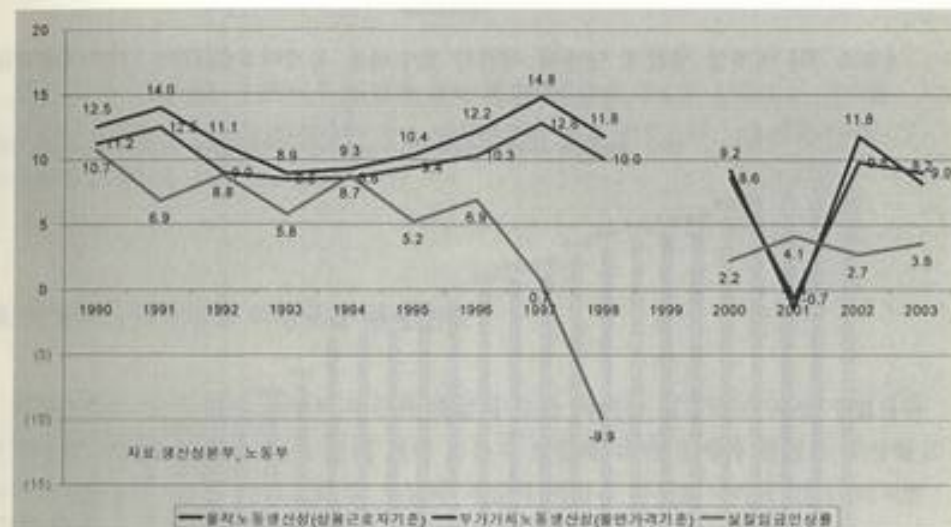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다른 노동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이라도 혹은 더욱 힘든 일이라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각종 4대 보험과 수당 그리고 산재처리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은 오히려 더욱 길다. 그야말로 자본가 계급은 쥐어 찢 대로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쉽게 그럴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해고와 재계약 문제로 인한 고용불안 때문이다. 그들이 목구멍을 타 넘고 오는 불만 중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뱉는다 하더라도 '언제 찢릴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재계약 해지의 불안감'을 떨쳐야 가능하다. 사실 그들에게는 노동조합 설립조차 먼 나라 이야기 인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은 일상적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지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 받으며 각종 작업장내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조건 자체는 목구멍을 타넘고 올라오는 불만들을 다시금 꼭 삼키게 하고 있다.

■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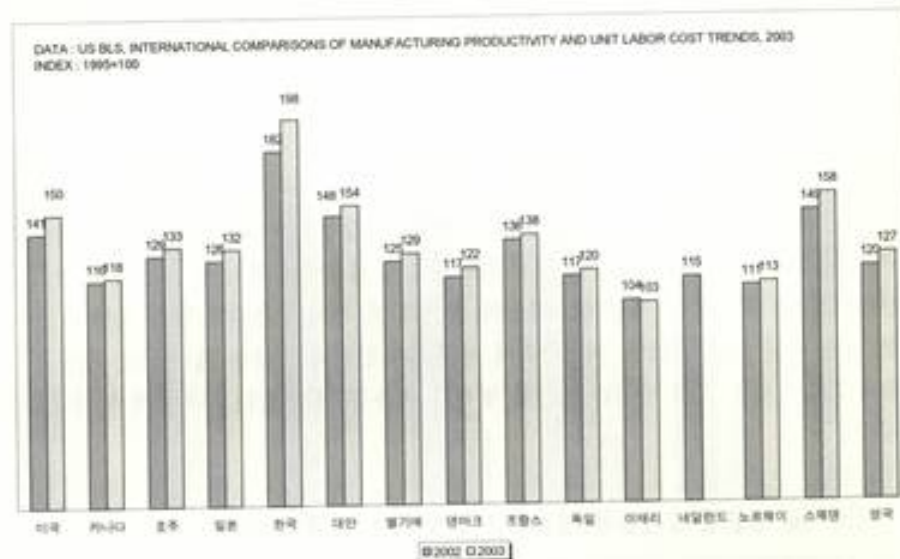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흔히들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몫을 정규직의 양보나 희생에서 찾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정규직도 자신이 생산해 낸 가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 수준이 다를 뿐이다. 비정규직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몫은 같은 노동자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는 자본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료 18]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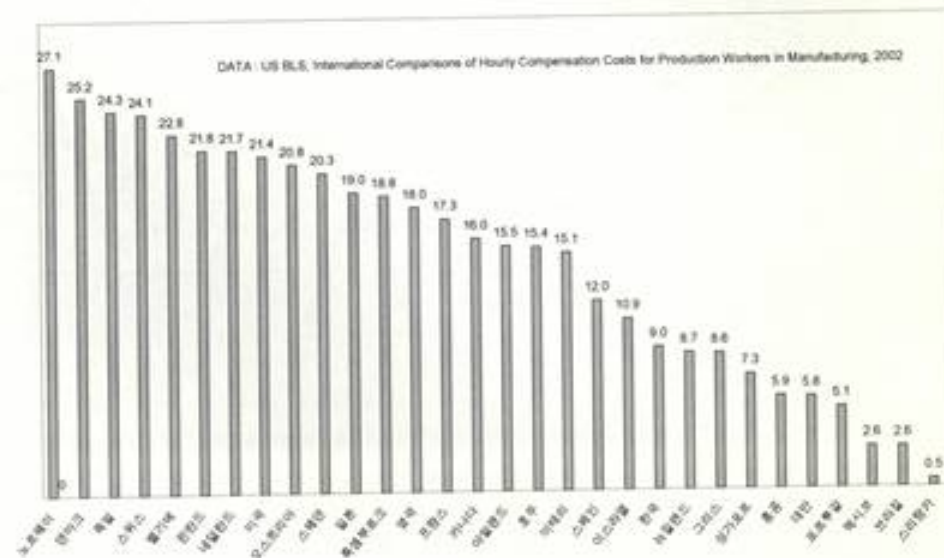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 사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생산성 증가율에 비속한 실질임금 인상율을 기록하였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생산성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실질임금 인상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생산물과 부의 증가한 몫이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19]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 국제비교 (199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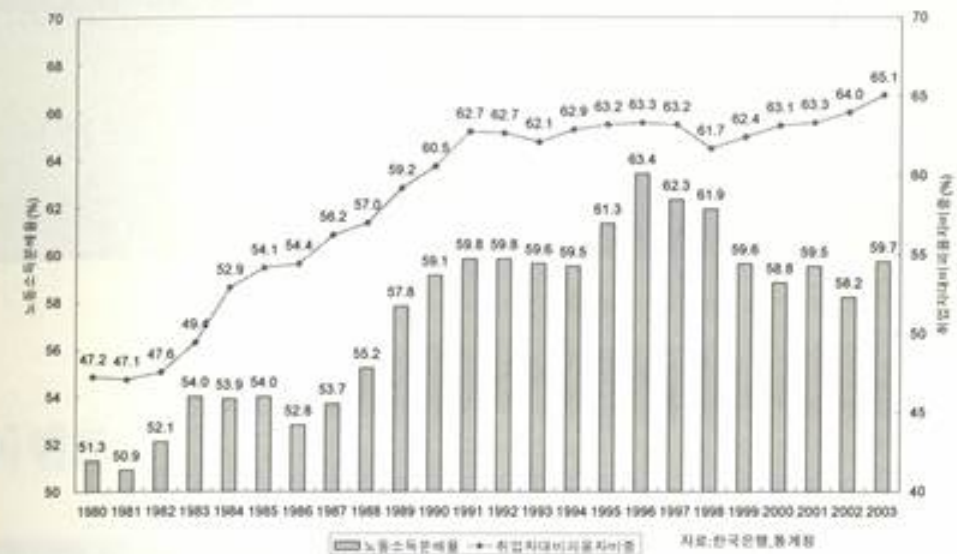


[자료 20]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 시간당 보수비용 국제비교(2002년, 단위:미국달러)



특히 비정규직 채용과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은 제조업과 같은 경우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간당 보수비용 수준이 현저히 낮다.

[자료 21]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사용자 비중 추이(단위:%)



위의 표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취업자 대비 사용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착취수준이 높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일상적 노학연대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비정규직은 남한 사회 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초과 착취를 실현하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이다. 자본가 계급은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 대중에 대한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단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 고용불안에 맞서, 장시간 저임금에 맞서, 부당한 중간착취와 직장폐쇄에 맞서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죽음을 각오했던 채 고가다리에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투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고용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인정, 직접고용 경쟁을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일상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반드시 이 야만적인 자본가 계급의 작품인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혹은 철폐 등의 애매한 구호가 아니라 명확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함께 싸워야 한다. 더 이상 자본가 계급의 분할전략에 기만당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좁은 문 사이를 뚫고자 하는 경쟁이

아니라 그 문 자체를 우리 손으로 열어 제치는 투쟁과 연대이다. 117주년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더 힘차게 싸워나가자! 일상적인 노학연대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 계급에게 반격을 가하자!

part. 4

투쟁사업장

- 이랜드, 코스콤비정규직, 재능학습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이랜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 되려고 하자 이랜드 자본은 0개월짜리 근로계약서(백지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했고 홈에버(예전의 까르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550여명을 집단해고 하는가 하면,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480여명에게도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정권은 오히려 "백지에 싸인 한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노동자들을 탓하면서 형식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자본을 비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사태와 투쟁에는 쉬쉬하면서 부르주아 언론들은 '비정규직 대거 정규직화'라는 타이들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뉴코아 이랜드 자본은 홈에버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해고하면서 동시에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을 말하는 것이지 정말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기간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대우는 비정규직과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이에 2007년 6월 24일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가 외주화 철폐와 비정규직 해고 저지를 위한 공동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랜드 자본은 전국 매장의 외주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용역을 고용해서 대체 투입하려

했고 이에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달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한 달에 받는 고작 백여만원 정도의 임금을 위해 온갖 수모와 아픔을 감수하며 일해왔지만 이제와 정규직화 시키는게 싫어서 협박과 회유로 재계약과 해고를 시키는 이랜드 자본의 악행에 맞서 이랜드 뉴코아의 노동자들은 300여일간 파업투쟁, 여러 차례의 매장 점거농성과 수많은 실천 투쟁들을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규 악법의 폐해와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를 알려냈습니다.

코스콤

코스콤을 지난 30여 년 동안 자본시장 IT인프라의 개발과 운용을 전담해온 기업입니다. 이 코스콤이라는 기업은 지난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한 악질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스콤은 중전이엔지 등 하내하청의 사업계획이나 방향,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채용, 작업지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해 왔고,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체제도 관여하는 등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또한 중전이엔지 등은 사실상 코스콤의 관리직원들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자회사로 전적으로 코스콤의 자본과 인력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에 코스콤이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를 두고, 이 자회사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노동자들을 직접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콤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의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

코스콤은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정규직노동자의 1/3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며 전산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이전까지 20년 동안 50건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을 4대보험만 가입시킨 채 저임금으로 착취하여 왔습니다. 코스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과 파견법개정을 앞두고 불법도급을 회피하여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을 영구화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짜르기 위해 50여개의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5개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사할 때부터 당연히 코스콤의 식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해왔지만 20년을 근무해도 150여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으며, 매번 '다음에는 임금을 올려주겠다', '다음에는 정직원이 될 것이다'라는 감언이설을 믿고 5년 간의 임금동결도 감내해왔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돌아온 것은 원하지 않는 업체로의 양수양도와 함께 또다시 닥쳐온 고용불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07년

9월 17일 코스콤 본사 정문앞에 천막을 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매법 운운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08년 3월 11일 코스콤 사측은 150여명의 용역을 고용해 천막을 폭력적으로 강제 철거 하고 그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비호하면서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려고만 했습니다. 끝내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도로점거를 했고 정부는 이마지도 일인당 100만원씩 벌금형을 내리는 탄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도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재능학습지



대부분 어렸을 때 접해본 학습지들 중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라는 재능교육은 2007년 5월 17일 수수료삭감이 포함된 신수수료제도가 개악되면서 수수료삭감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학습지 교사는 재능교육이라는 원청과 사업주와 노동자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사업주로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방식의

일을 하면서 회사의 방침과 관리로 일하고 있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고용형태의 노동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은 임금대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제도가 개정되면서 20~80만원의 수수료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학습지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고 해화동에 있는 재능본사 앞에서 12월 21일 천막투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구사대를 동원해 미처 천막을 펼치기도 전에 다 부숴버렸고, 그나마 남은 비닐을 치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마지도 재능교육 사측은 비닐을 찢어버리고 피켓, 개인가방, 스티로폼, 난로 등 모든 물품을 강탈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막농성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마지도 천막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철거하고 아예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쳤습니다. 다시 펜스 위에 천막을 치는 투쟁을 전개했으나 경찰은 무자비한 폭력과 연행을 했고 결국 펜스 앞에 작은 천막을 치고 투쟁을 진행중입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간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나이가 아들뻘 되는 관리자에게 욕들어 먹으면서 작업에 필요한 마스크와 장갑을 얻어 써야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어섰고 회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각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교섭을 피했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장내에서 집회를 하고 기계를 멈추는 강한투쟁을 벌이면서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단체협약과 불합리한 대우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남아있었고 올해 진성이라는 하청업체에서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성업체는 과거 투쟁을 통해 정년을 65세로 하고 70세까지 촉탁고용을 유지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12월 말 일방적으로 65세 이상인 18명의 노동자가 계약해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천막농성과 선전전, 중식집회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 투쟁은 단순히 고령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맞선 싸움이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PDI 지역에서 2개 업체 비정규직 18명을 여유인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인원감축을 한다고 사측에서 밝혔고 이미 정년퇴직자 자리에 신규채용이 아닌 일용직을 쓰고 있음에도 여유인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주야간 노동은 물론이거니와 잔업, 특근을 통해 겨우 생계비를 마련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잔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잔업과 휴업급여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를 갖고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퇴직금 문제라든가 신차종 관련한 문제 등 현안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며 해고자문제, 투쟁으로 수배생활을 하는 동지들에게 사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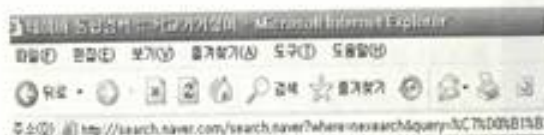
임금을 가압류하는 등 사측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공장안에서의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20일 넘는 단식투쟁 또한 진행했었습니다.

part. 5

교육, Education

-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첫 번째 - 학사관리



NAVER 학교가기 싫어 검색

통합검색 교육 검색 뉴스 검색 블로그 검색 지식백과

지식백과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7.04.02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7.06.19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6.08.28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7.02.06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7.05.25
 학교가기 싫어(초등) [초등, 실용] 2008.03.18
 학교가기 싫어... [학교생활] 2007.10.03

▲ 정말 다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합격 끝. 공부시작?

살인적인 입시제도에 입시공부만도 지쳤겠지만,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만 한다. 이미 여러 대학들이 입학 전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제2전공 의무화, 재수강제한, 강화된 졸업요건 등은 이들의 입학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학교가기 싫어!

싫어! 싫어!

팍팍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오직 희망은 대학에 가면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비단 노는 생각만 하지 않더라도, 꼭 짜여진 대로 공부하던 고등학교와 달리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도 대학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어 오르게 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대학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례 1. 서울대 제2전공 의무화

2007년 겨울 서울대 본부에서는 2008년 신입생부터 제2전공을 의무화하겠다는 학칙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생들은 다음의 안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전공 외에 하나의 전공을 더 이수해야만 한다.

1. 2개 이상의 기본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2.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해 이수하는 연계전공
3.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심층 이수하는 심화전공
4.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설계전공

학칙개정안은 별반 논의도 없이 나왔고, 교육의 일주체인 학생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다. 서울대 본부의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 안의 구체적인 상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위와 같은 문제보다 서울대본부가 왜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고, 스스로 구체적인 상도 제대로 없으면서 제2전공의무화 방안을 관철시키려하는 것이다. 서울대 본부는 이번 안에 대해서 "학생 개인별 능력과 진로에 따라 특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고 힘주어 말한다. 하지만 서울대 본부는 제2전공의무화가 가져다 줄 학생들의 학습량 증가, 산업자본에게 인기 있는 노동력 공급, 학생들의 경쟁증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제2전공의무화가 시행될 때 학생들의 학습량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공학인증제로 인해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공대의 경우(덕분에?) 제2전공의무화에서는 빠졌다.) 꼭 들어야 하는 전공과목 때문에 과목 선택권은 한없이 제한되고, 공부해야 할 양은 훨씬 늘었다. 게다가 제2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현행 전공 선택과 같이 '인원제한'을 두고 있어, 인기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경쟁이 추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제2전공의무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고려대의 경우에 인기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전공 재수, 삼수생이 늘고 있다. 학생사이의 경쟁강화는 결국 학생들의 힘을 약화시켜, 학생자치의 축소, 교육투쟁의 동력 감소를 불러온다. 또한 서울대본부가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나중에 CEO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업자본에게 인기 있는 노동력을 공급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교육자본으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학칙개정안이 발표되어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울대 본부는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자율 시행이고, 권한은 단과대학이 가지고 있다'며 본부를 향한 투쟁의 집중을 막고, 책임을 단과대학으로 떠넘기고 있다. 제2전공의무화에 대해 서울대 사회대는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반대가 80%이상을 차지하였다.

사례 2. 연세대 배치고사

2008년 연세대는 배치고사(글쓰기 시험, 영어말하기 시험)를 치르고 그것을 토대로 우열반을 편성하여 상반은 절대평가를 통하여 높은 학점을 주고, 중·하반은 상대평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연세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입학 이후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배치고사를 위한 준비에 목을 맬 것이 편하다. 특히 배치고사에 들어가는 글쓰기 시험과 영어말하기 시험은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아니다. 배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힘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결국 입시에서 뿐 아니라 반편성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극명히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 배치고사는 으레 1학년 때는 같은 과/반 학생끼리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분을 쌓는 현재의 상황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 학생자치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입학 전부터 입학이후에도 학생들의 경쟁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수준별 교육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연세대 교육자본의 말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정말로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만드려고 한다면, 1. 강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고, 2. 학점 부담 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성적평가방식을 지금의 차등학점이 아닌 Pass or Fail 식의 학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입학자 전원을 대상으로 TEPS시험을 실시하고 이공계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물리 등의 배치고사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도 학생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보다는 더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전의 학습을 증가시키고, 같은 과/반 학생 안에서 고급반과 보통반 기초반이 나뉘어 따로 수업을 들어, 다른반을 듣는 학생끼리 친분을 쌓을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부해서 남 주냐?’에 숨겨진 비밀

대학들은 학생들을 박세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엄격한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학점제한을 두는 것은 물론, 재수강제한을 대폭 강화하면서 학생들은 한번 학점을 잘못 받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대학들이 점점 졸업 요건으로 토익점수 얼마이상, 한자급수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화여대, 성균관대 등등) 거기다 최근에는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2전공의무화(서울대)를 추진하고, 배치고사를 통해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부를 많이 시켜주는 학교를 고마워하는(?) 학우들도 더러 있다. 생존을 위해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선택하고 있고, 토익점도는 이미 필수가 아니냐며, 학교에서 강제하나 안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우들은 학교의 이런 결정이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학습량으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불만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의 강제적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는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학이 왜 그렇게 학생들 공부를 못시켜 안달인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교육자본인 대학은 학생들 잘되라고 좋은 마음에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원하는 우수한 노동자를 배출하려고 더욱더 박세게 공부시키는 것이다. 교육자본은 우수한 노동자를 산업자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킨다. 산업자본이 원하는 노동자를 배출해야만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교육자본들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학습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그 과목을 꼭 듣고 졸업하도록 만든다. 또한 산업자본이 노동자를 교육하는데 돈이 적게 들도록 토익, 컴퓨터 자격증 등 다양한 조건도 갖출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노동자가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덕을 보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노동현장에서 박세게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노동자가 노동하면 그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가 덕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노동자인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그 덕을 보는 사람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들이다. ‘공부해서 남 주냐’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교육자본은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교육자본이 학생들에게 강요해 학습강도를 높이는 것은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빠르게 돌리고, 노동시간을 증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쟁, 경쟁, 경쟁.....

이런 학사관리 엄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비단 공부가 박세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학사관리 엄정화를 통해 교육자본이 부수적으로 얻은 일이 있으니(부수적이 아니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학생들을 서로 경쟁 시키고, 학생들의 자치단위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내신등급제가 실시된 후 고등학교 교실은 친구들끼리 삭막해졌다는데 이는 비단 고등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평가제의 오늘날의 대학에서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다. 또 취업을 위해 학점을 위해 공부해야할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반활동에 투여할 시간, 사회문제는 고사하고 학내사안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다. 학생운동의 위기와 과/반의 붕괴는 물론, 동아리들도 매년 신입생을 받기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가가 가장 원하는 일이다. 교육자본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회가 약화되고, 학생운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교육자본에게는 크게 이로운 일이다. 교육자본은 학생들의 삶이 어려워졌음에도 전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을 팍팍 올린다.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수강제한과 제2전공의무화, 배치고사 등을 매년 새로운 아이템인 것처럼 팍팍 찍어낸다. 이렇게 교육자본이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처리하는 것은

바로 학생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매년 싸움에서 지면서 약화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자본은 더욱 자신감을 얻는다.

교육투쟁은 우리의 무기!

교육자본의 힘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 것 없다. 그래서 혹자들은 좀 더 힘을 키운 후에 투쟁에 나서자고 한다. 하지만! 교육자본의 자신감은 매년 패배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키워진 것이다. 힘이 부족하다고 투쟁을 방기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더욱 박세진 학사관리업정화와 높은 등록금뿐이다. '학사관리업정화'에 담겨있는 교육자본의 의도와 그로인해 우리가 겪을 고통을 폭로하면서, 학내에서 교육투쟁을 더 열심히 벌여나가자!

너와 나의 '교육'이 아닌 우리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 무상교육 정취! 국립대법인화 반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 수많은 구호가 우리를 옆에서 아우성을 친다. 그리고 그 아우성은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들린다. 하지만 들리기만 한다. 아직 이 구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그들을 저항의 거리로 나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수차례 해 보았다.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교육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해보았다. 다소 난잡하여 죄송할 뿐이다.

1.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은?

헌법에 나온 교육권을 살펴보았다.

헌법 제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참 좋다. 단순히 보면... 헌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큰 틀을 합의한 내용(?)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좀 걸린다. 능력이라...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능력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교육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일단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은 없어 보인다?!

내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은 없어 보인다. 헌법을 보아서는... 그렇다면 크게 어떤 입장으로 갈리는지 한번 살펴보자.

①사료분석

얼마 전 하나의 자료를 두고 두 개의 결론을 내리는 싸움이 서울대에서 있었다. 그 내용은 서울대 신입생 출신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의 불평등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결론은 '강남서초, 이문바 8학군 출신자의 서울대 비율이 타 지역과 비교를 했더니 최대 16배나 높다.'였다. 알다시피 8학군 지역은 한국에서 최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결국 결론은 경제적인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원인에 대한 공격은 고교 평준화에 맞춰졌다. 한 쪽은 고교 평준화로 인해 우수한 학교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논리는 돈 없는 학생이 우수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었다. 또 다른 한쪽은 교육에 대한 평준화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는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모두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분석과 결론을 내린다. 어딘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거나 본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② 교육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교육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교육의 의미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 다른 의미를 지닌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나의 재화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의미는 이처럼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혹은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교육사회학자인 예플은 이를 두고 '교육'이라는 단어의 성격을 두고 벌이는 쟁탈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육'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쟁탈전에서 어느 쪽의 힘이 우월한지에 따라 오히려 교육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③ 교육의 역사적 요구

교육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1789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당시 혁명 이후 구성된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구체제의 법을 뜯어내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특히 요구되는 것은 '헌법', '민법', '교육법'이라는 3대 법안의 제정이었다. 헌법이야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요구되었고, 민법은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다면, 교육법이 이토록 중요하게 사고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정치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법 제정을 위한 당시 의회의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1793년부터 의회의 회기

절반이 교육에 관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육법의 제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구체제를 끌어낸 혁명 프랑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프랑스를 포함해 중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교회에 의한 지배가 보편적이었다. 그리고 이시기의 교육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이뤄졌다. 아동과 청소년은 국왕의 충성스러운 신민이면서 카톨릭 교회의 성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아동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간단한 계산을 배웠다. 이것은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신민으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기도문을 읽고 외우면서 교리문답을 진행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교리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튀세르는 이에 대해 교회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목표와 결과는, 단지 국가권력을 봉건귀족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상인 부르조아에게 넘기는 것, 즉 부분적으로 낡은 억압적 국가장치들을 파괴하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최고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민간인에 의한 성직자 임명이 실시되고 교회의 재산에 대한 몰수가 수행되고 종교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대신하여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 만들어진다. - '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결국 혁명을 통해 교회의 위치가 하락된다. 그리고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교육이 구체적으로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은 교육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때문이다. 현재 전교조의 통일교육을 문제제기한 보수 세력의 움직임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과거 유신 체제에서 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즉 교육이라는 것을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부르주아와 노동자·농민,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귀족과 성직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프랑스 공화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해에 맞추어진 교육을 통해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누가 교육(학교)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부르주아의 세상이 올 수도, 노동자·농민의 세상이 올 수도, 혹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귀족·성직자의 세상으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④ 현재의 교육이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MB도 TV에 나와 연일 하는 이야기가 더 자본주의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다저렇다이니... 자본주의의 사회란 자본과

노동의 대립, 착취가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앞에서 보았던 대로 교육은 해당시기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보면 노동력의 생산과 생산관계의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은 학교라는 교육 장치를 통해서 자본이 요구하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 농업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회가 유지되었다. 양반들만 교육을 받아도 그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불과 몇 십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그리 큰 문제는 없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을 중고등학교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시켜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어 가면서 노동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 또한 전문화 되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자본이 일을 시키기 힘든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로 인해 소수의 가진 자나 교육의 기회비용을 담당하겠다고 결의한 사람들만이 받았던 대학 교육의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짚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생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을 잘하는 것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교육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애국가를 불렀던 것들... 국민교육헌장 낭독... 반공과 자유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수업을 받았던 것들이 되겠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체제의 유지이며, 더 적나라하게 말했을 때는 보다 원활한 착취를 통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질 높은 노동력은 생산성을 높여주고, 또 순종하는 노동자는 자본의 착취를 저해하는 파업과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학교의 기능은 막대하다. 피교육자에게 일주일에 5~6일씩이나 불잡아 두고 끊임없이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⑤ 모순을 은폐하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체제 유지는 쉽지만은 않다. 자본가는 영원한 자본가이고 노동자는 영원한 노동자라는 법칙이 드러난다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본이 자신들의 착취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는 학교가 중립적이며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학교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적주의·능력주의의 논리가 발휘된다. 이것은

- 사회에 존재하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 결국 네가 못하는 것은 너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교육계는 장승수라는 신화적인 인물로 인해 이러한 논리를 좀 더 강고하게 만든 적이 있다. 집안도 가난하고, 그래서 비뚤어졌던 장승수라는 학생이 개과천선해서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공부했더니 서울대 가더라. 즉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증명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신화는 특히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처해있는 계층에서 더욱 확장된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 나기는 쉽지 않고 신화는 신화일 따름이다. 하지만 신화를 실화로 만들어 내는 것은 불평등의 구조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어'라는 논리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게 한다.

그러나 업적주의·능력주의에 의한 사회적 지위의 공정한 분배라는 신화는 그 본질을 완전히 은폐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은폐시키려고 해도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의 '2000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의 직업이 경영주(5인 이상 고용), 고급공무원 등 관리직이라고 답한 학생은 26.6%,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라고 답한 학생 23.2%였으며 공장 노동자 등 생산직은 9.3%, 판매직 9.5%, 농업 3.3%로 나타났다.

- 학벌없는 사회 언론 모니터링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한 것이 재생산이론이다. 왜 노동자의 자녀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생산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다.

결론적으로 살펴본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자본의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공정한 것처럼 교육을 포장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본질 속에 녹아들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2.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바라고 있는가?

많은 의견이 있을 부분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겪어왔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잘 보이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많은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기 참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어설피게라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공동체의 성원으로써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적인 태도와 지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 인지적(지식), 정의적(행동) 내용을 함양하는 것이 복잡한 현 사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모습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배우는 현재의 교육이 내용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다르게 된다. 어떤 내용이 우리와 우리 다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사회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식이라는 것이 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학의 의미가 규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구기관으로써의 대학이 가져야 할 위치가 사회의 문제를 대학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사회의 교육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 교육에 의해 진행된다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해당되는 말이다.²⁾

2) 평생교육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장시간-장기간 노동에 찌들어 있는 개인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연결되면서 평생교육까지 비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을 하는 나이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면 사회적으로 그러한 교육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구조적 대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에 담겨 있는 평생교육의 문제이다.

3. 우리 함께 저항을 선택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존립기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저항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연 무엇에 대항해서 싸울 것인가?³⁾

첫 번째로 대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주되게 사고해야 하는 지점이 대학등록금이다.⁴⁾ 사회가 발전하면서 한 개인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을 넘어 전문적인 노동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교육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기보다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회에서 노동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문제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된다. 대학을 다닐 등록금이 없는 개인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에서 시작해서 노동할 권리까지 빼앗기는 현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는 대학교육의 의무화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계층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교육이 담당하기 때문에 쉽게 대학교육을 의무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등록금 문제를 전가하면서, 그리고 학자금대출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의 무상화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장을 핵심적으로 추려본다면 이렇다. 교육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개인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교육을 잘 받으면 분명 그 개인에게는 더 많은 능력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그 개인을 고용하게 될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 개인이 더 많은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의 기업에 들어온다면 그 기업은 보다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개인이 생산하게 되는 부의 가치를 기업이 일정부분 가져가기 때문이다.⁵⁾ 결론을 내려 보면 기업이, 그리고 사회가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된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교육을 통해 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가 된다. 무상교육의 구호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알바를 하지 않아도 대학교육을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데 공부를 더 열심히 안할까?

3) 고민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제출해 본다. 많은 보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4) 물론 대학등록금 문제만을 교육의 문제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여타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5) 이 부분은 착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보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part. 6

다가오는 4월 실천,

“비정규직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학생 실천단”의
의미는?

4.30 메이데이의 실천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렇듯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실천들이 바로 4.30 메이데이를 전후해서 벌어지곤 합니다. 4.30 청년학생문화제를 비롯하여 5월 1일에 펼쳐지는 메이데이 투쟁, 그리고 이에 앞서 투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수많은 4월 말의 실천들... 이런 실천들이 현재의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의 실천들을 만들어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사실 5월 1일의 메이데이는 단지 노는 날이 아닌, 전 세계노동자들이 '주8시간 노동 쟁취!'를 구호로 국제적인 파업과 시위를 만들어낸 날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옛날부터 자신들의 단결을 확인하고 자본과의 거대한 한 판 싸움을 위해 5월 1일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메이데이는 전국적인 격렬한 투쟁과는 거리가 먼, '하루 쉬고 시청에 모여 집회하고 헤어지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의 직장과 공장에서 깨지고 터지며 목이 터져라 연대를 호소해도 5월 1일은 언제나 그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래 4월 30일 학생들의 투쟁은 4.30의 유래에서도 볼 수 있었던 듯이 실제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교육이 보편적 교육이 될 수 있는 저항을 시작해야 한다. 단순히 켜(등록금)의 장벽이 아니라 대학교육, 그리고 모든 교육에 내재되어 있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처져 있는 교육의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 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나올 수 있도록 이동권을! 그들이 학교에 와서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을! 함께 싸워야 한다. 장애인을 배제한 교육의 현장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반도 함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년 공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경쟁사회로 내몰고 있는 사회에 저항하자! 대학 입시를 통해 재생산된 사회계층은 그 자식에게도 되물림된다. 이렇게 세습되는 사회적 계층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공동체는 붕괴가 되고 하나의 사회에 두 개 이상의 신분이 존재하게 된다. 조선시대처럼... 대학평준화부터 시작해서 자립형 사립고의 흐름까지 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물 건너간 로스쿨, 의학전문 대학원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보자. 지난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 투쟁에서 우리는 왜 이것을 막아낼 수 없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교원양성전문대학원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고민이 짧아 내용이 빈약하다. 더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과감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옹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이었습니다. 1994년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고 이 투쟁을 옹호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였고, 그것이 바로 430 청년학생문화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10년이 훌쩍 넘게 지났지만 그 투쟁의 의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해진 자본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공세에 많은 노동자들이 시름하고 있고, 이에 맞선 투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실질적인 힘을 모아낼 수 있는 투쟁을 430 메이데이 시기 때 만들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통해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여론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대를 통해 실제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들이 벌어졌던 것은, 단순히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국민들에 대한 선전전을 잘 진행해서 촉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인 매장을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멈춰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시민들은 이랜드 투쟁을 알게 됐고,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게 되던 것입니다.

우리가 4월에 벌여야 할 실천은 우리의 문제의식을 나누는 단순한 캠페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자본과 맞서 싸우는 현장에서 우리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투쟁에 학생들이 힘을 모아 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4월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할 길은 무엇인가!



현재 4월 투쟁에서 핵심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투쟁은 '비정규직 사업장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의 투쟁입니다. 4월 말까지 투쟁 계획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공투단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개별 투쟁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이 되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끈질긴 투쟁으로 특수고용 투쟁의 본이 되고 있는 학습지 노동조합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본과 투쟁하는 일들이 펼쳐지면 그 투쟁에 공동투쟁단에 함께 하는 모든 동지들이 '집중투쟁'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 투쟁 사업장에서 개별 자본에 대한 투쟁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은 각자의 열악한 환경과 한정된 인원과 자원으로 인해 큰 힘을 가진 투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쟁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더욱 커다란 대오를 형성한다면, 실제로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과 전망이 있었기에,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집중적으로 자본에 맞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투쟁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연대를 집중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는 작년 이랜드 투쟁이 벌어졌을 때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학생들, 각종 단체들이 이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이랜드 매장을 봉쇄하는 투쟁에 집중적인 연대를 만들어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공투단에 모인 힘을 통해서 작년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매장 진입 및 봉쇄 투쟁을 3월 28일에 한 차례 진행할 수 있었고, 4월 4일에는 재능 본사 앞에서 침탈당했던 천막을 다시 세워내는 집중 투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월 19일의 이랜드 투쟁 300일 문화제 때에는 상아 홈에버 매장 앞에 모인 수많은 공투단과 학생, 사회단체 대오들이 실제로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인 힘을 통해서 실제로 자본을 직접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확대야말로, 비정규직과 같은 모순점들의 문제점을 최대한 폭로하고, 아직 투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투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최대의 폭로이자 선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투쟁들을 통해서 개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노동자들 전체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투쟁사업장에서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는 투쟁이 형성될 만큼 활발히 싸우고 있다면, 자신의 투쟁이 시급함에도 그 투쟁사업장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업장에서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투쟁을 통해 확대되는 이해관계는, 결국 다른 투쟁사업장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할 수 있게 될 만큼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들의 온전한 파업권 쟁취 등 노동자 전체의 정치적 과제들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받아 안아 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면적인 투쟁을 진행할 때만이 그 과정에서 법에 의해 온전한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든지, 투쟁을 진행할 때 경찰이나 구사대에 의한 부분별한 폭력이 벌어지고 그것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정치적 과제들을 제기하고 실제로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이런 예로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기관사들이 출근시간 100%, 그 외 시간 80%, 일요일 50%는 무조건 필수유지업무라는 명목으로 차운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파업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법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겠지요? (파업 시 위수치만권의 업무 유지가 안 되므로) 헌법 문구로 파업권을 보장한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노동 악법들이 이 땅에는 눈을 시키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 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현재 공투단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개별 사업장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투쟁을 만들기 위한 각 투쟁사업장들의 결의가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투쟁을 시작으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투쟁에 연대를 함으로써, 자본을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집중투쟁을 통하지 않는 캠페인의 성격을 띤 실천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투쟁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투쟁과 자본에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 ^^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는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을 해서 전망 있는 투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투쟁에 무관심했던 대중들은 노동자 투쟁의 비전과 전망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투쟁에만 머물던 투쟁은 '구조조정 반대' 투쟁으로 격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시작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투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번 공투단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포괄하여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벽을 뛰어넘었으니,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벽을 뛰어넘어 단일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끊임없는 연대와 실천투쟁을 벌여나가야겠지요.

4.30 청년학생문화제 자체도 그런 투쟁을 정리하고 풀어내는 판으로서 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4월 30일 당일에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 사회단체들이 서울로 집결합니다. 그런 날만큼 최대한 4.30 문화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문화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본과의 투쟁이 펼쳐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문화제를 투쟁하는 현장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이랜드 매장 앞에서의 투쟁 문화제와 같이 자본을 실제로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진행하는 것, 그런 경험 자체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공투단에서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 분들도, 기왕 1년에 한번 전국의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 현장에서 함께 투쟁함으로써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번 모여 4월 30일 낮에 한번 모여 간단한 학생들끼리의 투쟁을 진행하고 흐름을 끊은 채로 밤에 자리에 앉아 문화제만 보고 가는 심심한 자리보다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직접' 투쟁 현장에 연대하여 실질적인 투쟁의 힘을 한번 모아내는 자리. 이런 한 판이 전국의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 한 번 불꽃처럼 불타오르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바로 학생 공동투쟁실천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을 통해 활동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4월에 현장투쟁 기조를 반영한 학생사회의 대중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학생들도 기존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투쟁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더 큰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을 앞장서서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실천단의 실천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part. 7

미완의 혁명,
4월 민중항쟁

거리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다.



광복 이후 만들어진 해방 공간은 그간 일본의 제국주의에 억눌려 살던 많은 민중들의 다양한 요구들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해방 공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거리로 뛰어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의 이 같은 요구가 이승만 정권과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되었고, 민중의 모든 변혁적 요구의 표출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강화된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에 의해 학살과 같이 폭력적으로 탄압받았다. '폭력적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포'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거리를 낳았다.

그러나 독재 정치, 경제적 파탄, 그리고 비민주적인 사회 체제에 노출되어있던 노동자, 농민, 학생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폭력에 대한 공포와 그로인한 침묵을 깨고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국전쟁과 이후의 반공주의로 인한 변혁 운동 세력의 몰락이 다시 회복하고 있었던 1960년대의 산물이 바로 4월 민중항쟁이었던 것이다.

피의 화요일, 그리고 4월 민중항쟁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불만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민중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직접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자 학원의 정치 도구화에 반대하며 대구의 고교생들이 항의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분출된 민중의 분노는 3월 15일 부정 선거를 목도하면서 폭발하였다.

부정선거 반대 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4월 11일 마산의 부정 선거 항의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열사가 눈에 쇄무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발견되자 운동은 부정선거 규탄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로 항쟁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4월 19일, 1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총궐기하여 중앙청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발포를 시작했고 이승만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월 15일, 제자들의 희생을 목도한 대학 교수단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민중의 지지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정권을 원했던 미국의 지지를 잃은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승만 하야 이후 민주당 정권과 장면 내각이 등장하였으나 이들은 4월 민중항쟁으로 표출된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항쟁으로 이승만을 물러나게 한 그 자리를 항쟁을 주도했던 세력이 아닌 항쟁이 낳은 요구나 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뿌리 자체는 이승만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민주당이 항쟁의 결과를 독점, 정치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4월 민중항쟁을 경험한 학생, 노동자 세력은 학원과 사업장 내에서 투쟁을 지속해나갔다. 항쟁의 대의가 정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자 혁신 세력들은 통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혁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학생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등의 주도 하에 민족통일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미완의 혁명. 지금은 완성되었나?

1960년 4월에 일어났던 일들은 체제의 급격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성을 가지지 못했다. 다만 그 '혁명적 분위기'에 주목했던 이후의 민주화 운동 세력들 속에 혁명으로 각인되어 있을 뿐이었다.

'독재 정권 타도'를 내세우며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의 질적 성장을 바랬던 4월, 그 거리를 뒤덮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뒤이어 등장한 부실한 장면 내각과 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묻혀버렸다. 이렇게 끝난 '변혁 운동의 맥'이 다시 잡히기 까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다.

4월 민중항쟁이 오랫동안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있던 까닭을 단지 군사 독재 세력의 등장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사회 변혁에 참여했던 많은 운동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를 찾지도 못했고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정부나 의회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 정치권 내에 왜곡 없이, 굴곡 없이 반영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운동과 제도권 정치가 분리되면서 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들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사회 변혁 세력의 정치 세력화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항쟁의 열매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아래로 부터의 변혁 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기성 정치 엘리트에 의해 운동 이후의 사회가 주도되었던 점이나 운동의 요구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최장집은 4월 민중항쟁을 보수적 근대화 내지는 수동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4월 민중항쟁'은 광범위한 대중들에 의한 한국의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다.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치, 사회, 경제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가득 찬 운동이었다. 오늘날 '4월 민중항쟁'은 헌법에서 규정되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정신으로까지 격상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사회, 경제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 4월 민중들의 요구는 여전히 정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제도권 정치에 반영시킬 변변한 대변자조차 갖지 못한 현실 역시 그대로이다. 그 해 4월,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던 정치적 민주화가 형식적이게나마 달성되기 까지 우리는 27년을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4월 민중 항쟁의 또 다른 과제들이 완성되어 '혁명'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 오늘날 4월 민중항쟁과 그 정신은 정치권의 들러리로 전락했다. 사진은 4.19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박근혜.

part. 8

국가의 경계를 넘어, 티벳 독립 운동을 지지할 때



1949년 중국의 인민 해방군이 침략할 당시만 해도 티벳은 국가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엄연한 독립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용하여 무력적으로 티벳을 점령하였고, 아직도 많은 티벳 민중들이 자치권과 더불어 종교적·문화적인 고유한 양식을 탄압받고 있다.

티벳은 현재 중국의 패권적인 점령 하에 중국 내 자치구로 분류되어 있다. 양국 간에는 1951년 티벳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지만, 이러한 협정들이 무색하게도 무자비한 탄압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티벳인들이 학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 연락과 두절된 채로 투옥되었다. 하지만 티벳 민중들은 1987년 9월부터 1995년 중반까지 200건 이상의 민중운동을 펼쳐내면서, 결코 자신들의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양국 간의 갈등은 티벳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강압적인 소수민족 정책에 기반 한다. 현재 티벳은 59년에 인도로 망명정부를 수립한 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독립문제는 중국, 인도,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이 티벳 문제에 반응하는 것은 티벳의 가치를 인식한 데서 온 부분, 즉 그들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티벳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가지면서도 중국이 티벳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중국 전체의 행보로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도 이번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국제사회에서 큰 지지를 얻어, 자국의 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국외의 네팔, 인도 등에서 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시위는 1959년 3월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민중이 독립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투쟁한 1959년 3월운동의 5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폭력적 통치에 맞선 독립운동이다. 그들의 요구 사안은 《민족자치자결권과 인권 보장,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경제적 동등권리 보장, 티베트자원 수탈반대, 한족 티베트이주정책반대》로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립운동의 탄압이 8월에 열릴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각국의 운동단체들의 문제제기를 피해 "중국정부의 자치문제"라고 일관하기까지도 한다.

국내문제에 간섭하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미디어와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 받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흡수하고 있는 국가의 패권적 정책들이 티베트인과 여타의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탄압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내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 민중들의 정당한 권리는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수탈 받고 있는 우리네들의 이야기이다. 티베트의 독립 운동이 한낱 중국내 치안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인 연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